

대안적 타자성을 위한 미술실천

오인환(작가,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수행성에 기반하는 미술공간의 정체성

다양한 미술공간의 존재 유무는 미술계의 생태 환경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미술공간은 어떻게 정의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은 수의 미술공간들이 미술계에 존재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유사한 성격/기능을 하는 동일 종(류)으로 획일화 되어있다면 공간의 다양함은 확보될 수 없다. 여기서 다양함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이고, 차이는 물리적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운영/성격/기능의 수행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1970년대 개념미술가들은 장소를 크기, 규모, 질감, 채광 등 장소의 물리적 속성의 집합으로 규정했던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다르게 미술의 장소를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역이며, 하나의 장소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이 복잡하게 구성된 제도로서 재규정한 것은 널리 알려진 미술사적인 사실이다. 오늘날 미술공간의 정체성은 제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한 미술공간의 정체성은 미술제도에서 체제/운영/성격/기능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라는 수행성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공간이 미술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 비영리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주도의 후원제도의 운영이라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비영리기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및 후원 시스템의 활성화는 물론, 또 다른 제도적 여건들 특히 비영리공간을 지지하는 관객과 작가군의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술가들이 다양한 정체성의 미술공간들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한국의 대안공간/비영리공간의 초기 형성이 가진 큰 의미에 비하면 오늘날의 대안공간/비영리공간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대안공간/비영리공간의 형성이라는 과제의 달성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작가로서 나는 모든 원인을 나열하기 보다는 나와 관련된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소위 2000년대 초반, '비영리'와 구분되지 않고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단어, '대안' 그리고 '타자 및 타자화'가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대안과 타자가 결합하는 미술 전문가들의 활동, 즉 '대안적 타자성'을 실천하는 작가들의 실존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대안적 타자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타자성과 타자의 정체성의 연결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자의 의미는 다차원적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주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어느 사회에나 다수로 상정되는 '주류' 혹은 '보편'의 체제가 있기 마련이다. 타자는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상정된다.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어 왔는데 그것이 퀴어 입장이다. 퀴어 입장에서는 유형학적으로 분류되는 타자의 개념을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젠더, 섹슈얼리티 등은 타고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후기구조주의의 발견은 정체성을 피부색, 생식기의 형태 등 유형학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수행성'을 정체성 규정의 중요한 근거로서 제안한다.

헬 포스터는 “그녀가 타자로서 인식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변형적 타자성(transformative alterity)을 획득한다는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헬 포스터의 지적을 숙고할 수 있는 한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타자의 욕망을 이분법적으로 축약하면 주류 밖에서 주류 내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류편입의 욕망과 주류의 편입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타자의 영역을 창조하려는 욕망으로 구분된다. 타자는 항상 이러한 두 개의 욕망 사이의 어디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혼인의 법적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일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타자 스스로 주류의 법의 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이며 주류 편입을 지향하는 타자의 욕망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설득력있는 지적이다. 반면 동성애 차별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가부장제를 지목하는 입장에서는 결혼 제도는 가부장제를 대표하는 법적 장치로 인식하며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이것을 벗어나는 대안적인 방식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즉 주류의 편입을 거부하고 대안적 타자성을 실천하자는 입장의 사례이다. 미술의 문맥에서도 타자의 미술은 대안성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이원화될 수 있다. 주류 미술계로의 진입을 타자 정체성의 수행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미술 체계로부터 차별화되는 미술의 창안을 위해 대안적 타자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동시대 미술에서 미술가의 입장이나 정체성을 작가의 발언이나 작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보다는 작품생산에서 수용의 단계까지 실천하는 미술가의 수행성이 판단의 근거로서 유효하다. 미술가의 미술실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의 하나가 미술공간일 것이다. 물론 대안적인 입장에서는 전시공간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다른 전략은 자신의 미술실천에 부합하는 플랫폼으로서 미술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비판적인 작가들이 상업 미술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듯이 역으로 미술계에서 대안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안적인 작가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술가와 미술공간의 상호관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미술가와 미술공간의 상호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비영리갤러리와 상업갤러리를 구분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찾기 어렵고 아트페어와 비엔날레서 동일한 작가들의 작품을 발견하는 것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술제도 비판의 입장에서는 미술가들의 수행이 맥락적인 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미술가들의 수행성은 물리적인 조건으로서 전시공간이 아닌 맥락으로서의 미술공간에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미술공간과의 적절한 관계는 자신이 지지하는 미술공간의 기능/유지/역할에 공헌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반복하면 한국의 비영리공간이 지속적으로 다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된 것은 안정된 지원시스템의 부재나 운영자들의 한계 그리고 반동적인 다원화가 그 원인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이러한 비영리공간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타자성을 실천하는 작가군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때 유행과 같이 유포되던 그리고 지금은 그 실체를 추적하기 어려운 ‘대안’ 그리고 ‘타자’는 결국 ‘대안적 타자성’이 아닌, 기존 미술제도를 욕망하면서 대안성을 일시적으로 차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것은 나름 하나의 진단을 내리게 하는데, 대안적인 타자성의 획득은 수행성을 근거로 하며 수행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술가와 미술공간의 상호 지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 미술공간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환경 및 맥락을 제공한다면, 동시에 비영리 미술공간 및 대안공간을 지지하는 미술가들은 개별 공간의 비영리 혹은 대안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